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 2009-①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류석상(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개발부 수석연구원)

나종주(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개발부 책임연구원)

최인선(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개발부 책임연구원)

권정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개발부 선임연구원)

목 차

제 1 장 연구목적 및 범위	1
제 2 장 정보사회의 국가정보화법제도 개선방향	5
제 1 절 정보사회의 헌법적 쟁점	5
제 2 절 정보법의 의의와 과제	16
제 3 장 공공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 방향	24
제 1 절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쟁점과 과제	24
제 2 절 재난관리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30
제 3 절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	37
제 4 장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	45
제 1 절 그린 IT 추진을 위한 u-work 법제지원 방안	45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49
제 5 장 정보사회의 정보화역기능 제도개선방향	60
제 1 절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60
제 2 절 국가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법제 분석	64
제 3 절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73
제 6 장 향후 법제 개선 과제	79
<참고문헌>	83

표 목차

<표 1>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	3
<표 2>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특성	10
<표 3> 개인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학설	11
<표 4> 매체특성별 인터넷 규제	12
<표 5> 정보기본권의 구성	17
<표 6> 정보법의 구성체계	18
<표 7> 정보법의 발전 연혁	19
<표 8> EU 새로운 규제체계(NRF)의 지침 및 주요내용	20
<표 9> 온라인완결서비스의 구축 모델	24
<표 10> 전자문서 관련 해외 법제 현황	25
<표 11> 개별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개념	27
<표 12> 개별법에 따른 전자화 문서의 개념	28
<표 13> 포스트 카트리나 비상사태개혁법의 주요내용	31
<표 14> 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처 및 기관	32
<표 15> 영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률	33
<표 16> 영국의 재난관리 담당기관	34
<표 17>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34
<표 18> 해외 디지털보존 제도	37
<표 19> 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 방법	39
<표 20> 디지털 보존 관련 현행법 현황	44
<표 21>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u-work 법제 현황	47
<표 22> 주요국의 PIA 관련 제도	51
<표 23>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내용	52

<표 24> 개인정보 보호기구 관련 주요국가의 동향	54
<표 25> 개인정보보호법(안)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내용	56
<표 26>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58
<표 27> 사이버테러의 의의	61
<표 28>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률	63
<표 29> 해외 각국의 정보보호 추진체계	66
<표 30> 해외각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	67
<표 31>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 법제	69
<표 32> 국가기밀 보호 관련 법률	70
<표 33> 중요정보의 국외유출방지 관련법제	70
<표 34> 전자서명 및 인증 관련 법제	71
<표 3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처벌 관련법제	71
<표 36> 분야별 정보격차해소 정책	74
<표 37> 정보화 법제도 쟁점 및 개선과제	80

제1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정보통신기술(ICT)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특히 등장한 지 어언 40년 역사가 된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재로 깊숙이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일상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banking, 결제 등 경제적인 소비활동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사업모델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그간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90년대 중반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중심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제도를 정비 추진해 온 것이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제도도 마련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정보화가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됨에 따른 적절한 규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정보사회의 법제도를 재정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신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IT관련 정보통신부의 기능 및 관련 법률이 타 부처로 이관, 개별 추진됨에 따라 정보화 법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¹⁾ 특히 행정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정보화법률 제·개정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은 한국 정보화진흥원, 정보화법제개편 진단과 개선방향, 'IT정책연구시리즈 제3호

2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안전부는 소관 2개 법률과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7개 법률을 크게 5개 영역별로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난 8월 최종적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도 각각 소관 사안별로 기본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개정 추진 중인 법률이 여전히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시급히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영역은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이 아직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거나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원격의료, u-city 등 새로운 영역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IT기업들이 u-city 사업수행시 가장 어렵다고 지적한 것도 법제도 미흡이었다.²⁾ 그동안 불법이었던 원격진료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등에 u-health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 개발시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로 인하여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환경에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³⁾

본 연구는 정보화관련 법제 중에서 주요 쟁점들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2009.4.16) 참조

2) RFID저널 코리아, u-city 법제도와 IT이슈 풀어야 성공, 2009.10.12

3) 특히 u-서비스 추진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진흥원, u-서비스 추진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2007.12’ 참조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법 등 종합적인 법제도 틀에 대한 논의, 공공정보화부문, 사회현안, 그리고 정보사회의 역기능 등 총 4개 분야에 각각 소주제 총 10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별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선정된 주제들은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들이 판단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표 1>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

구분	과 제
기초	정보사회의 헌법적 쟁점
	정보법의 의의와 과제
공공 정보화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쟁점과 과제
	재난관리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
사회 현안	그린IT 추진을 위한 u-work 법제지원 방안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정보 사회 부작용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국가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법제 분석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4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선정된 각기 주제별로 법제도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하여 해외 입법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개선방향 및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동 연구를 위해 총 11명의 법학과 교수들이 1~2개월간 심층적인 연구를 토대로 개별 보고서로 집약되었으며, 종합보고서에서는 각기 주제별로 핵심 쟁점과 법제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도출된 법제도 개선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비방안으로까지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보화 전반에 있어 주요한 법제도적 쟁점들을 기초연구차원에서 논의하고 향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문들을 발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는 총 11권으로 구성되며 1편은 종합편으로 내부 연구진들이 집필하였으며, 10개 세부주제별로 총 11명의 외부연구진이 참여하였다. 동 연구보고서는 향후 정보화 법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 기초연구자료로 그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정보사회의 국가정보화법제도 개선방향

제1절 정보사회의 헌법적 쟁점

1. 정보사회와 헌법

가.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정보사회의 출현으로 일방향적·획일적에서 쌍방향적 의사소통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 조직들이 생성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문화적 논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공동체와 사회적 조직 등의 변화는 국가-사회관계론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의 정치적인 의사는 곧바로 국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조직들도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포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정보사회의 다원주의적 발전에 따라 국가-사회의 중첩적 조화 및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의 영역의 구별이 허물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 정보사회의 발달과 헌법적 쟁점

정보사회에서의 헌법과 관련된 쟁점은 국가-사회관계론의 변화에 따

6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른 ‘인권’과 ‘민주적 지배’와 관련된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개입에 따른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는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쟁점에서 더욱 중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 발전의 핵심인 정보가 가지는 기본적인 양면적 속성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정보 사회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이 바로 인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민주적 지배 양식의 변화를 야기한다. 정보사회의 근간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를 일부 권력층 및 지식인들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활성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공공관리론’ 이후 서구사회에서 발전해 오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의 발전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민주적 지배와 관련된 쟁점으로 연결된다.

2. 정보사회와 인권 - 개인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가. 개인정보통제권의 보호문제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인권침해이다.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러한 상향식(bottom-up) 정보흐름 및 하향식(top-down) 정보통제 구조로 인해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시의 필요적 기능과 침해적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고전적인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고지 및 동의 원칙을 수정하여 집단적 협의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⁴⁾ 이러한 비판의 주된 논점은 정보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정보의 객체, 즉 국가의 통제를 위한 정보수집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데 있다.

셋째,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법체계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및 개인위치정보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및 개인위치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전통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인위적으로 수집·제작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정보로서 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고지 및 동의에 의한 수집·활용이라는 개인정보

4) 권건보,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헌법적 문제점의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1호, 2008; 김승환,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제31집, 2008 등 참조.

8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보호 법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상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것으로 개인 및 언론기관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다소 미비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나, 그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나, 이 법은 ‘정보통신 분야’라고 하는 다소 특수한 분야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침해에 대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⁵⁾

(2) 개인정보통제권의 보장체계⁶⁾

1) 감시체제로서의 근대 및 현대사회와 개인정보통제권의 필요성

국가의 감시능력의 증대는 개인과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간영역의 정보수집과 처리수준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단순히 국가중심의 정보통제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정보통제의 위험성이 급증하게 되

5)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현영,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입법체계”, 연세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5; 同人,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 등 참조.

6) 김중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법무부 인터넷 법률 제4호, 2001, 26-43면)

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제가 개인의 독립성과 공동체적 삶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와 공동체 주권의 왜소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장운영체제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인이 자본화되고 권력화 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혹은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치적, 헌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2) 개인정보통제권의 상위개념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부적절성

프라이버시권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보호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프라이버시권의 정당성을 개인의 인격성보호, 자율성 보호라는 사생활영역 보장에 한정시키고 있어, 일상화된 정보관리에 대한 통제 또는 정치 및 경제권력을 통제하는 견제권으로서의 정치적·헌법적 의미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극적 프라이버시	적극적 프라이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로이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의 공적 활동 및 다른 기본권의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10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경계도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을 통해 재조정되는 유동적인 것이다.⁷⁾ 공동체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는 개인의 인격성의 보호라는 전통적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차원에서 계속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체의 운영상의 필요(기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 활용권을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권력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특성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특성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공공성· 개인정보의 범위 확장 : 간접적인 관련성에 의해 식별가능한 개인 정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집적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권리· 공공정보의 공개청구권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대국가통제를 실질화시키는 도구· 민간단체가 보유한 정보에도 효력을 미침

4) 한국 헌법상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

헌법학계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통제권의 근거에 대한 학설의 내용은

7) A.Etzioni, The Limits of Privacy, Basic Books, 1999, 특히 ch.6 참조.

다음 표와 같다.

<표 3> 개인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학설

학설	자기정보통제권의 근거	주장 내용
제 1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조항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7년 헌법이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창설된 것이며 이는 특히 1987년 헌법 제127조 제1항에서 정보의 개발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한 것에서도 인정될 수 있음
제 2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이 (1)일정한 종류의 기록의 금지, (2) 개인정보모집방법의 규제, (3)개인의 의사에 반한 입력의 금지, (4) 개인정보의 무기한 축적의 금지, (5) 자기파일의 액세스권, (6)개인정보의 정정권을 내포
제 3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¹⁰⁾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설과 제2설의 절충
제 4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규정과 헌법 전문, 제4조와 제8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규정이 이를 보완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통제권의 의미가 개인의 사적 인격의 보장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사결정과 밀접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

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1) 국가가 인터넷을 규제하는 이유의 복합성

국가는 다양한 인권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인터넷은 다양한 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복합적 이해관계의 결합영역이므로, 인터넷은 당연히 국가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보편적 문제점은 각 나라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규제의 필요성이 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상충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표 4> 매체특성별 인터넷 규제

전통적 매체	인터넷 등 신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유산으로 인한 자유 확대 강조 · 국가개입 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급효과의 급속성으로 인한 자유의 과잉이 문제 · 국가의 조정적 역할 강조

(2) 한국에서의 인터넷 포털 규제의 방향성

한국에서 인터넷 포털의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주제가 되는 것은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수성이나 언론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인터넷 포털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8)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244-231면, 특히 244-242, 429면

9)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0, 518-524면

10) 헌재 2005.07.21, 2003헌마282, 판례집 제17권 2집, 81, 90-90;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 판례집 제20권 2집 상, 1115, 1136-1136.

11)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23-31면.

최근 정부여당을 주축으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논의, 허위사실유포죄를 강화하는 논의, 인터넷 여론조작에 대한 강한 규제 등 일련의 공안적 차원의 인터넷 규제론이 확산되고 있다.¹²⁾ 이러한 인터넷 규제론은 법의 이념인 정의와 형평성의 관점에서, 또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의 실현수단이라는 특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3. 정보사회와 민주적 지배 -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가. 정보사회와 민주적 지배의 변화

(1) 전자정부의 헌법적 함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통해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목적이다.¹³⁾ 기업가형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전환을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에 바탕한 정부혁신론은 절차중심적 책임성(process accountability) 보다는 성과중심적 책임성(accountability in terms of result)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과 업무처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자정부는 이 정부혁신론의 주요요소이다.¹⁴⁾

12) 이점에 대해서는 성낙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 박진애,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 이향선,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 등을 참조

13) R.Silcock, "What is e-Government?", Parliamentary Affairs, Vol.54 (2001), pp.88-89.

14) 신공공관리에 바탕한 정부혁신의 개념에 대하여는 김종철, “관료국가에서 계약국가로? -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의 변화”, 『법과 사회』, 제20호, 2001, 68,82-84면. 전자정부의 정부혁신적 의의에 대하여는 J.Morison, "Online government and e-constitutionalism", [2003] Public Law, pp.14-23 참조.

14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전자정부는 국민과 정부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정부는 정보집적화와 공동관리 및 처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 되며, 행정의 투명성의 증가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자율성 제고와 민주적 참여의 전제가 되는 정보공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입헌주의가 정치지배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2) 입헌주의적 헌법질서에 있어서 전자정부의 위상과 기능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전자정부는 자유를 확대하는 가능성과 국가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민주주의적 차원에서는 전자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대와 국민과 정부간의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정부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정부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여,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전자정부는 체제의 목적과 운영의 방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1)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관계

전자정부가 입헌주의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제는 전자정부 구축의 기초인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사적 가치이면서 비밀성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공동체적 삶의 전제로서의 공정 가치와 공개성을 특성으로 하며 그 경계는 결국 민주적 결정과정을 통해 정하여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전제로 하는 정보의 전자적 수집 및 공동이용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정이 민주적이고 자유보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문화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2) 정보관리체계의 분립화와 외부통제장치의 구축

전자정부체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동이용이 가져 올 수 있는 정보안전과 정보조작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관리체계의 분립화이다.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처리·분석의 권한과 그 평가·분석의 권한을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복수화한다면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보집중에 의한 오남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더 나아가 지방분권화나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이는 전자정부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외부통제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정보의 외부통제장치는 행정권과 입법권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개인정보통제권의 보장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공유가 공동체적 삶의 기본전제가

15) 한상희, “정보화시대와 헌법의 해방적 관심 - 헌법정치를 위한 시론 -”, 민주법학, 제13호, 1997, 234면; 임규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8월 20일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3, 243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원화 된다. 만일 개인정보의 공유가 공동체적 삶이 기본전제가 아니라면 개인은 헌법상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수집, 생성, 유통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면 개인정보의 공유가 공동체적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경우 그 수집 및 생성자체에 대한 절대적 전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민주적이다.¹⁶⁾ 개인정보가 공동체적 삶의 전제가 되어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가치는 비밀스러운 사적 정보의 유지라는 사적이고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공적이고 객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이때 개인정보의 보호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하는 통제작용에 기여하는 이념과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한은 입헌주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를 필수요건으로 전자정부가 추진되어야 한다.

제2절 정보법의 의의와 과제

1. 정보법의 개요

정보사회가 진화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권리(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자기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액세스권 등 정보관련 기본권들이 주장되고 있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헌법은 표현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민주권의 원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

16) R.Whitaker, The End of Privacy, 1999, pp.134-135.

기결정권 등 기존의 기본권에서 새로운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 또는 복합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기본권 체계를 재정비하여 “정보기본권”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⁷⁾ 이 견해에 의하면 정보기본권은 정보의 자유와 보호를 규범영역으로 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기존의 기본권 체계에서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일영역이거나 독자적인 기본권을 관념되었던 기본권들을 유형화하여 포괄적인 “정보기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보기본권을 설정할 경우 정보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정보공개청구권’, ‘정보프라이버시권’ 및 ‘정보보안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5> 정보기본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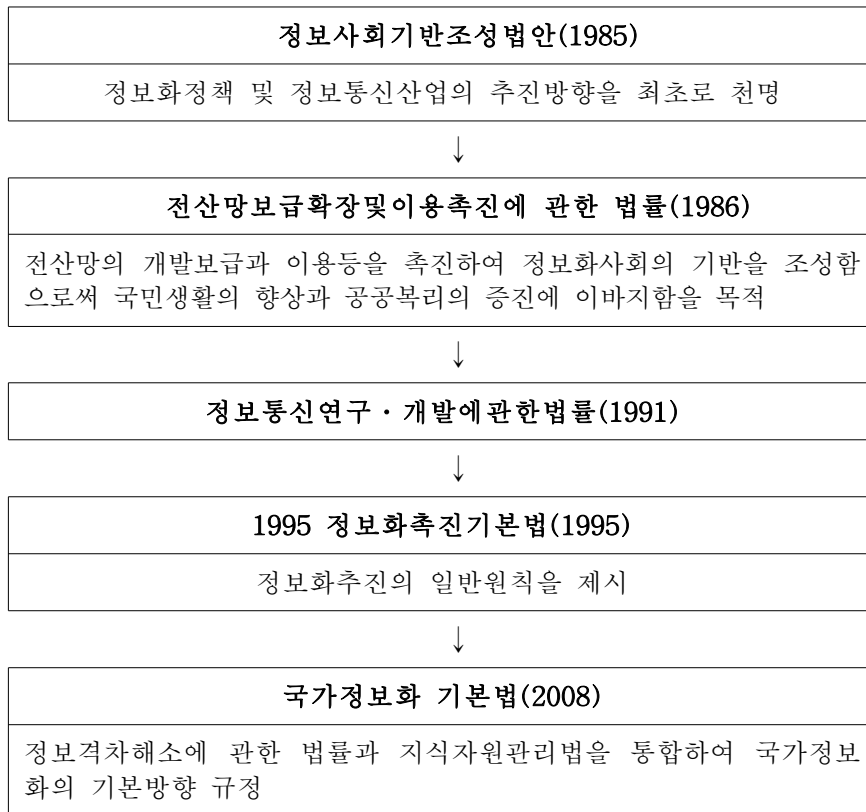
권리	내용
정보공개 청구권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기록사항 등에 대하여 개인이 그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프라이버시권	· 인격주체의 ‘홀로 있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소극적 프라이버시의 권리’ 및 적극적인 의미로서 인격주체성을 현출하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보안권	· 정보형식의 완전성, 즉 안정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17)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정영화, 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7호, 403-442면

<표 6> 정보법의 구성체계

(가) 정보사회 기반조성			(나) 정보사회 서비스활성화		(다) 정보통신 산업육성	(라) 정보 사회 지식 재산권 확립	(마)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1) 정책 추진 기반 확립	(2) 정보 통신 기반 구축	(3) 정보 통신 접근 기반 확보	(1) 전자 정부 실현	(2) 전자 거래 확산			(1) 개인 정보 보호	(2) 정보 통신 윤리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전자 정부법 정보 시스템 의 효율적 도입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 기본법 전파법 정보 통신 공사 업법 건축법 도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정보 통신 기반 보호법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전기통 사업법 농림어 업인삶 의질향 상및농 어촌지 역개발 촉진에 관한특 별법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주민 등록법 지식 정보 자원 관리법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원격 영상 재판에 관한 특례법	전자 서명법 전자 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 유통 촉진법 전자금 융거래 법 전자 거래 기본법 전자 어음의 발행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사업법 소프트 웨어 산업 진흥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게임산업 진흥에관 한법률 영화및비 디오물의 진흥에관 한법률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저작권 법 컴퓨터 프로 그램 보호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 통신 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 7> 정보법의 발전 연혁



2. 해외 방송통신융합분야의 정보법 현황

EU에서는 방송통신 및 융합형 서비스를 다루는 규제의 외적 프레임워크를 설립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몇 가지 원칙들을 가이드라인(지침)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규제프레임워크지침에 의하면 경쟁(Competition)지침, 인가지침(Authorisation), 접근지침(Access and Interconnection), 보편적서비스지침(Universal Service),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등 5개의 지침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8> EU 새로운 규제체계(NRF)의 지침 및 주요내용¹⁸⁾

지침	주요내용
규제 체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역무별 규제체계를 계층별 수평규제 체계로 전환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 기술중립성) · 시장지배적사업자(SMP)에 대한 보편적서비스나 설비접근 제공, 회계분리, 정보공개 등 특별의무 규제 부과 · 규제기구는 독립성, 불편부당성, 투명성 확보
인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면허 폐지 → 일반인가 전환(통지만으로 사업개시, 방송·통신 공통 적용), 모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보장 (단, 주파수 면허는 제외) · 의무사항 최소화 및 비차별적 적용
접속지 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나 관련 설비에 대한 접근, 상호접속에 있어서의 경쟁지속, 상호 운용성 및 소비자혜택을 목표로 사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규정 · 상호접속 개념을 CAS, APIs, EPGs 등에 확대 적용
보편적 서비스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 정립, 사업자 의무규정 · 보편적서비스 보전은 시장왜곡 최소화의 원칙을 준수
경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커뮤니케이션 망과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예외적 권리를 폐지, 주파수 이용권은 객관성·비차별성·투명성·비례성 절차에 따라 부여 · 수직적 통합구조를 가진 전자커뮤니케이션 망 제공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 금지 · 공중 이용전화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의 공중 전자커뮤니케이션 망과 케이블텔레비전 망 운영의 법인분리 의무
정보 보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등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리와 자유 보장 · 전자통신 장비와 서비스,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18) 오용수, 수평적 규제체계의 이해와 적용

미국은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지 않고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FCC의 미디어 또는 서비스의 분류와 그를 통한 규제정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주된 흐름은, 서비스 분류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분류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방송과 통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 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또는 융합형서비스 그 자체로 인정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명	내용
Communication Act	·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단일법
Telecommunic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Communication Act의 추가개정 · 지역에서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전화 산업에 모든 텔레콤 사업자들이 상호 접속 의무를 부과하여 경쟁 촉진 · 케이블TV와 과점 상태에 있었던 장거리 전화사업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과 이용 요금 등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켜 보편적인 서비스 실현 ·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허가기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 · 소유 규제 조항을 완화 · 프로그램의 등급제 의무화 ·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V-칩(Violence chip: 폭력 영상물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장착

22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독일에서는 방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주(州)가 관할하고, 통신에 대해서는 연방이 관할하는 이중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적용되는 법제도 역시 이원적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된 법제의 운영과정에서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능률적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7년 9차 개정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fü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fStV)”을 새로운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조항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하였다. 동 협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멀티미디어를 규제하던 기존의 “미디어서비스 국가협약(MDStV)”과 “텔레서비스법(TDG)”을 폐지하고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TMG)”을 제정하였다.

텔레미디어법에 의하면,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개념이 방송, 통신 서비스, 텔레미디어의 가장 상위의 역무분류 개념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를 일반 서비스제공자와 업무상으로 텔레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국가의 단일기구인 ‘총무성’에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권을 종합적으로 행사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다만 일본에서는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나의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법’ 그리고 제3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 정보법의 과제

현행 헌법은 알권리,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액세스권 등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본권 명문화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권,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독자적 또는 종합적으로 해석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본권들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정보기본권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지위와 법적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를 현재의 수직적 사업 분류체계를 수평적 규제로 전화하는 문제가 핵심이슈이다. 네트워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을 이동하며, 사업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경쟁을 촉발하여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법제에 의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만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합법 형태의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과 다른 정보의 수집자 및 정보이용자들과의 조화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단독행위나 거래행의 등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수립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 공공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 방향

제1절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쟁점과 과제

1. 민원서비스 고도화 방안 : 온라인민원완결서비스

행정안전부는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2009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 2009년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불충분한 전자화로 인하여 민원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방문에 따른 비용,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변환에 따른 비용, 종이문서 보관의 어려움, 민간의 전자화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전자적 민원사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표 9> 온라인완결서비스의 구축 모델

이 메 일 을 이 용 한 모 델	정 부 전 자 문 서 유 통 망 을 이 용 한 모 델	전 자 문 서 보 관 소 를 이 용 한 모 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유편을 이용하여 행정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완결된 형태의 전자적 방식 보완성 및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및 발급된 전자공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성이 확보된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 활용범위가 정부전자문서유통망에 접속하여 이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한정 민간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기관 도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관 서비스, 증명·발급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전자문서보관서 이용 공공부문과 연계하는 경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필요

2. 온라인민원완결서비스 관련법제

1996년 유엔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채택 이후 해외선진국들은 전자문서와 관련한 법들을 제정하여왔으나, 민간부문에서의 전자거래 내지 전자화 문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전자공문서 및 행정부문에서의 전자화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드물다.

<표 10> 전자문서 관련 해외 법제 현황

국가	법명	내용
UN	전자상거래모델법 (1996)	· 국제거래상에서 다양한 법의 존재로 인한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국제거래법의 통일과 조화를 촉진할 목적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 전자문서 및 그 유통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승인
미국	연방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의 활성화를 목
일본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민간부문의 무서류화(paperless) 촉진

한국의 온라인민원완결서비스 구축과 관련되는 법제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전자서명법 등이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취급에 필요한 원칙,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인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에 관한 설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정부업무 처리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하며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바뀐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자문서 관련 법률은 전자문서 작성, 전자공문서의 성립, 전자문서의 송·수신, 발송 및 도달시기, 종이문서와 문서업무감축 계획,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감축실적의 공표, 문서감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화문서관련 조항은 종이문서의 보관에 따른 비용 내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는 전자화문서가 오류 없다는 완전성 및 신뢰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 전자화문서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러한 완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생명주기(ILM)에 따라 6개월 동안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유예기간을 두어 이중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러한 유예기간을 단축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자화문서 제도는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보관의 불합리를 제거하고 보관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는 스캐닝문서의 활용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전자화문서를 활용한 비용의 절감 및 업무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통한 업무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전자화문서의 위·변조 용이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작성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여 보관의 무결성도 보장하고 있다.

3.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현행 전자문서제도를 살펴보면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

<표 11> 개별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개념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전자거래기본법
중앙부처·지자체·군 기관에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성립된 전자공문서 및 접수한 모든 전자문서를 의미	‘문서’ 대신 ‘정보’로 표현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전자적 결제로 성립하는 전자공문서와 이외의 전자적 정보까지 포함	私 경제분야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전자적 거래에 관한 전자적인 정보자료를 의미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및 발급에 있어서는 행위주체(행정기관), 근거 법령(민원사무처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관련한 전자문서의 개념 및 적용범위는 ‘행정기관의 전자공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에 대한 성립 및 효력은 사무관리규정 및 전자정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행 사무관리규정의 ‘공문서’ 정의(제3조 제1호)에서 접수문서에도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

<표 12> 개별법에 따른 전자화 문서의 개념

전자거래기본법	국세기본법	사무관리규정 민원사무처리법 전자정부법
종이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 은 문서를 정보처리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납세자가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 거래기본법상의 전자 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에 보관하면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간주	명시적 규정이 없음

전자거래기본법·국세기본법상의 ‘전자화문서’ 조항은 私경제분야의 재화·용역거래 문서나 납세자의 증빙서류를 전자화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업무 내지 행정기관 공문서에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은 전자화문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시행령에서만 전자문서 서식에 필요한 사진·도면, 종이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로 전자화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하는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볼 수도 있으나, 전자화문서는 원본인 종이문서의 사본으로, 문서의 성립이 당초부터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져 원본적 성격을 띠는 전자문서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무관리규정, 민원사무처리법, 전자정부법 등을 통한 행정기관의 공문서 및 민원업무에 적용되는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무관리규정에 ‘전자화문서’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전자화문서의 요건, 전자화 절차 및 방법, 기술표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은 ‘전자화문서’ 개념을 신설하고 민원

신청 및 처리결과 통지 문서에 ‘전자화문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민원인이 신청하는 서류의 전자화 절차·방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 도입과 함께, 전자화문서가 진본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한 원본 보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민원처리결과를 전자화문서로 통지한 경우, 민원인 또는 제3자가 원본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 원본을 그대로 보존, 또는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하므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간을 가지는 것 중에서 전자화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전자화문서의 생성에 따른 폐기와 원본 대조 절차는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준영구 이상이 아닌 문서에 대하여 전자화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원본을 폐기하고 전자화문서로 생성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민원처리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법이나 전자정부법에는 전자 문서로의 민원신청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민원신청시 신청서나 구비서류를 문서나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전자화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사무관리 규정상 민원서류의 형태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접수하면 공문서이기 때문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나 이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전자적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자화문서의 발송근거를 추가하여 전자화문서의 발송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법에 '정부전자문서보관소' 설치·운영 근거 및 보관소 활용문서의 도달시기(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무관리규정상 전자우편을 통한 발송방법 삭제 및 '정부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문서발송 방법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재난재해 위기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우리나라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가 구축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관리 관련 법률이 산재하여 있고, 법률의 지나친 세분화는 재난관리의 집중력을 약화시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합적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주요 국가의 재난관리법제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이후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의 요청없이도 연방정부의 개입·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비상사태관리청은 ‘재난구호 및 비상사태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tafford Act’)에 의하여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연방부처 및 기관을 지휘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자원을 배분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연방정부의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끝난 직후 연방비상사태관리청은 전국적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가 부적절하였고 피난과 구호활동 등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군대 대응과 후방지원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07회계연도국토안보부세출예산법’의 약 3분의 2 이상의 내용이 재난관리에 관한 규정(제6편)으로 구성되었고 이 규정을 ‘포스트 카트리나 비상사태개혁법’(Post-Katrina Emergency Reform Act)이라고

<표 13> 포스트 카트리나 비상사태개혁법의 주요내용

- 연방비상사태관리청 : 종합비상사태관리시스템에 따라 국가 지도 및 지원
- 대통령은 모든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난대비프로그램 결정, 관련 연방기관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에게 재난경고를 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명령, 적시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경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을 관련 연방기관에 명령, 대규모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그리고 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규모가 1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즉시 피해지역에서 활동할 ‘연방조정관’(Federal coordinating officer)을 임명
-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난 또는 비상사태 발생을 선언
-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대통령은 권한과 자원의 이용을 연방기관에 명하고, 모든 재난구호지원, 연방기관, 민간단체,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재난구호지원 조정

약칭,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제5편에 규정되어 있던 연방비상사태관리청의 조직기구에 관한 규정과 비상사태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Stafford법’의 개정규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14> 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처 및 기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연방비상사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및 테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 및 기능 조정 · 국경과 교통시설보호 · 태풍·홍수·테러 등 재난상황의 대비, 대응 및 복구 · 정보분석과 국가기반시설보호 · 국토안보 및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진흥 · 화학·생물학·방사능 그리고 핵 관련 대응수단의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행위를 포함한 자연적·인적인 모든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며,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조정

영국의 재난관리는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의 대응을 법제화한 1920년 긴급권법(Emergency Powers Act)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6년에 외국의 적대적 공격과는 관련 없는 비상사태 및 재난과 관련하여 민방위자원을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시 시민보호법’(Civil Protection in Peacetime Act)을 제정하였고 2004년에는 ‘시민비상대비법’(Civil Contingencies Act)이 제정하고 1948년과 1950년의 민방위법(Civil Defence Act)을 폐지하였다.

<표 15> 영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률

법률명	주요 내용
평화시 시민보호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자원'(civil defence resource) :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인력, 부동산, 장비, 서비스 및 시설 등 민방위를 목적으로 기관에 유지·제공·이용 또는 보유하는 모든 자원 · 비상사태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급박하거나 또는 그런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지방정부가 모든 지역 또는 일부 지역, 모든 주민 또는 일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민방위자원을 사용할 수 있음
시민비상 대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emergency)는 전쟁 또는 외국의 침략은 물론 테러리즘을 포함 · 지방정부에 비상사태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계획준비 의무와 시민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협조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 부여 · 장관은 지방정부에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의 피해를 감소·통제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1920년과 1926년의 긴급권법을 폐지하고 여왕에게 규칙제정권 부여 · 비상사태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표 16> 영국의 재난관리 담당기관

기관	주요 업무
제1차 책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경고·통지 · 서로 다른 비상대응기관 및 타 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 · 비상대비계획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발생의 위험을 평가 · 책임기관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계획 유지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사태 방지 및 피해 감소·통제·경감, 국민에게 경고, 정보 및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유지
제2차 책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교통, 보건·안전'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 · 1차 책임기관을 지원

<표 17>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재해대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법 · 목적 :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 · 국가의 방재 조치 강구 의무 ·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실시 · 기초지방공공단체는 해당 지역과 관계되는 방재계획을 작성·실시 · 주민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자발적인 방재활동에 참가하는 등 방재에 기여하도록 노력 · 방재활동의 조직화, 계획화를 위한 종합조정기관으로 중앙방재회의, 도도부현방재회의, 시정촌방재회의 설치 · 재해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 비상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 및 종합조정

일본은 재해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법으로 재해대책기본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의 [표 17]과 같다.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0년대에 인적 재난,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법률이 산재되어 있고, 각 법률마다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종합적 재난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기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재난관리법제는 재난관리 법률의 세분화, 재난개념의 불명확성, 재난관리업무의 다원화, 재난관리단계 및 조직체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재난관리에 대하여 많은 법률이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법률의 세분화는 재난관리의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그 결과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복구지연으로 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긴급구조, 복구로 구분되고 ‘대비’는 긴급구조와 연계되고 있다. 대비는 재난을 예방하여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체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재난관리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법상 안전·재난관리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외에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 소속 하에 ‘중앙사고수습

본부'를 두고 소방방재청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있다. 재난대응을 위하여 중앙에서는 별도의 4개의 기관이 지방에서는 3개의 기관이 지휘를 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중첩되어 그 역할 및 관계 정립이 불명확하여 재난대응체계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쉽게도 「재난기본법」은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련법령이 존재하여 재난관리를 저해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개별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별적 계획이 아닌 종합계획화 하거나 재난대응계획을 국가단위 또는 지방단위 계획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국가의 재난 및 비상사태를 비상시·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시민보호 및 안전'의 측면에서 상시대비체제를 구축하여 어떠한 재난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발생을 대비·예방할 수 있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동원이 가능하고, 정보공유 및 현장지휘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서로 중첩된 기능 수행 및 불명확한 역할과 관계정립으로 인해 빚어지는 혼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난대응기구를 통합하여 모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간의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3절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

1. 디지털 자료 보존에 관한 국제적 논의

최근 디지털 정보의 한계와 보존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유산 보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표 18> 해외 디지털보존 제도

기관·국가	내용
UNE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Preserving Our Digital Heritage)(2001.10) ·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UNESCO 헌장(The UNESCO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the Digital Heritage)(200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유산의 보호범위, 디지털 유산에의 접근, 디지털 유산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협력
WI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 관하여 국제회의(2008.07) ·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의 법률상·계약법상 조화 방안 · e-저널 보존, 이미지 보존, 온라인 콘텐츠의 보존을 위한 저작권법상 쟁점 연구, 디지털 자료의 보존·저작권과 관련된 입법론, 자발적 조치 및 평가 연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의회도서관의 국가 디지털 정보기반 및 보존 프로그램 : 중요한 디지털 자료 보존, 참여기관 확대 및 상호연결 강화, 관련 기술 기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 제108조(b),(c) : 도서관이 소장한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본 3개의 제작을 허용 · 저작권청에 2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납본대상을 출판된 것에 한정 · 웹에서 자료를 스트리밍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내려받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출판에 해당하지 않아 납본대상이 아님 · 웹상 전자적 저작물의 경우 보존용 복제가 이루어져야 납본가능 · 도서관은 의무납본으로 접수한 대상에 관하여 부과된 일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저작권자의 특별한 허락 없이 납본된 대상을 저작물로 이용할 수 없음 · 웹 아카이빙의 경우 공정이용의 법리를 원용하여 저작권법의 제약을 피함 <p>※공정이용의 법리 :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저작물의 실질성 또는 이용된 저작물의 양, 시장에의 영향</p>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 정보시스템위원회(The Joint Information System Committee: JISC) : 도서관·문서보관소에서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시행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 2003 납본법 개정 : 대영 도서관과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국립 도서관의 비인쇄출판물을 납본대상으로 확대
네델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도서관 : 디지털 자료의 보존 프로그램 운영 · 납본제도 없이 출판자협회(NUV)의 자율적 협력에 의존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기관에 의한 자발적인 디지털 문서보존 수행 · 호주국가도서관의 PANDORA 웹 아카이빙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출판과 웹사이트의 장기접근을 위한 작업을 수행 - 참여기관은 선별된 저작권자와 출판자에게 아카이브를 위한 자료 요청과 온라인 접근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를 수집 · 디지털자료를 제외한 호주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을 호주국가도서관에 1부 의무적 납본

2. 디지털 자료 보존과 복제권 등 저작권법상 법률관계

웹을 통한 정보의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웹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웹문서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정보자원의 비중도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방법, 전자기록물 영구기록 보존을 위한 기준 모델인 ISO 14721의 개발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표 19> 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 방법

매체이전 (media migration)	마이그레이션 (migration)	에뮬레이션 (emulation)
수명이 다 된 매체에 담긴 콘텐츠를 동일 유형의 새로운 매체로 옮기거나 디지털매체에 담긴 정보를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같은 보다 안정적인 다른 매체로 옮겨 이중보존하는 것	디지털자료를 하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다른 구성으로 또는 한 세대의 컴퓨터기술에서 차세대 기술로 정기적으로 이전하는 것	오래된 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플랫폼을 모방하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마치 과거와 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인식하려는 것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되고 통신방송 융합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정보를 디지털 매체에 담아내는 정보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자료의 보존은 기존의 전통적 저작물 보존과 다르게 살펴봐야 한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구체적인 보존방법(또는 보존전략)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권이 논의뿐만 아니라,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하는 경우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존행위로 인하여 원 저작물의 내용 변경 여부는 저작인격권의 논의대상으로 동일성유지권과 연결된다.

가. 복제권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저장되거나 제작된 저작물은 사용되거나 전송될 때에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게 되는데 이러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어왔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서는 특정한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허용한 복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형태의 보존이 행하여질 수 없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일정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관리단체에 허락을 받아 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불법복제방지 방안이 강구되었다. 저작권법은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술적 보호조치 그 자체를 무력화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

다. 따라서 도서관, 교육기관 등이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력화를 위한 도구를 공공기관에 임치하는 방안 또는 신탁기관에게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배포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보존용 복제물을 다수의 도서관 등에 배포할 경우에 어느 한 곳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수를 복제하여 배포한다는 것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지 않는 한, 저작권침해를 불러온다.

다.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법 제13조).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정보를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같은 보다 안정적인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경우, 원 저작물의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이 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되는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이 정한 내용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납본

디지털 환경에서 서적 외에 디지털 출판물을 납본대상으로 확대하는 법률규정이 증가하고 있고 현행 도서관법에서 디지털 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정하여 납본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근 들어 각국은 국가의 문헌 보존과 이용 및 저작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본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납본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출판물의 범위와 방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도서관법은 온라인자료의 수집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신설(제20조의 2)하여 디지털 자료의 보존(수집)과 이 때 빚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문제는 도서관이 디지털 파일을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권 보호 등의 이유로 납본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뒤따른다.

라. 라이선스

디지털 자료가 온라인상 이용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즉 정보이용계약(라이선스)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디지털자료를 도서관에서 정기구독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종료하면 더 이상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다. 문제는 라이선스 약정기간의 만료 후에도 종이로 인쇄된 저널과 마찬가지로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을 위하여 복제와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선스에 기초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표준적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여 실무에서 활

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간 약정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항목을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라이선스에 있어서도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license)¹⁹⁾를 고려할 수 있다.

3. 현행 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 모색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각 지역도서관도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온라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한정하여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의 향상 발전에 있어 상대적 차별을 가져온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외의 다른 도서관도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들도 타 도서관과 연결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보존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밖에, 도서관법에는 디지털 파일형태의 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한 후의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요청사항에 응한 권리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하나로 묶은 후 이를 저작재산권 제한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본 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도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19) 라이선스 집중관리제도란 저작권관리단체와 법률관계가 없는 제3의 저작자에 속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관리단체와 법률관계를 체결한 저작자에 대한 법률관계와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44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표 20> 디지털 보존 관련 현행법 현황

법명	내용	문제점
저작권법 제31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도 판매되는 때에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된 도서가 판매되어도 복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써 충분히 불법적 복제 방지 가능 · 법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라고 디지털 형태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서비스가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함 ·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이 판매되는 것 경우가 흔치 않음
도서관법 제20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제4장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

제1절 그린 IT 추진을 위한 u-work 법제지원 방안

1. 그린 IT 추진과 u-work 법제 지원방안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IT 기기 확산 및 상시 가동으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로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까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IT 활용이 CO₂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세계자연보호기금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해외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의 해결방법으로서 Green IT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IT 부문의 그린화를 위해서 정보자원의 통합 및 친환경 이용 문화 확산이 필요하며, u-ICT 서비스 도입·활성화로 에너지 절약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u-Work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2. u-work의 개요

u-work란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ICT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각 근무 장소에 의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센터, 이동원격근무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u-work를 통하여 기업은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인재의 확보, 조직의 전문성 향상을 얻을 수 있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 취업기회의 확대,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거주지 선택의 폭 확대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가사회는 u-work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량 감소,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의 취업촉진, 대도시 집중화 현상 완화, 지방 취업기증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work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u-work 현황은 원격근무의 개념 및 인식 미비와 원격근무 관련 법제도 미비 등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3. 국내외 u-work 법제 현황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u-work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1996년에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제83차 총회에서 가내근로자에 관한 제177조 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Home Work)과 제184호 권고(ILO REcommendation Concerning Home Work)가 채택되어 가내근로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었다. EU에서는 2002년 유럽수준의 경영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재택근무에 관한 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elework)이 체결되었다. 독일은 재택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인 법안이 없으나, 가내근로법령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 제7권에 특정산업 및 직업에 적용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직업범주에 재택근무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The Employment Act 2002가 제정하여 6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자에게 유연근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재택근무를 명시하고 있는 개별법이 없지만, 판례는 재택근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가내노동법에서 재택근무자의 법적지위를 정의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수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u-Work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 u-Work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30조의 온라인 원격근무 관련조항과 특허청 훈령인 재택근무 시행규정이 유일하다. 민간부문에 직접 적용되는 u-Work 관련 조항은 발견되지 않으며, 종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의 확대해석을 통해 u-Work의 관련 법적 문제가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u-work 법제 현황

국 가	주요내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주에서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분의 재정지원 및 민간부분의 세제혜택 등을 통한 원격근무 도입촉진 · 일반적으로는 원격근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관계법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work는 개별근로계약 내지 복무규정에 의해 규율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4월, 'The Employment Act 2002 제정 : 6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자에게 유연한 취업형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수여 및 이에 대한 고려의 무 규정
프 랑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전 제7권에서 재택근무자의 요건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을 충족하는 재택근무자는 법적인 종속관계 없어도 법에 의해 근로자성 인정 - 주문자는 노동법상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 및 재택근무자 사용과 관련한 의무 부담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로자에 대한 독립적인 법 없으나, 대체로 재택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준근로자의 범주에 속함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가내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자의 법적지위를 독립사업자 또는 가내근로자(근로자)로 규정 · 후생노동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재택근무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에도 노동 기준관계 법령 적용(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 총무성의 ‘재택근무 안전 가이드라인(안)’ 발표(2004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에 가정되는 위험성을 전제로 대책 등을 제시
E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원격근무에 관한 협정(‘Framework Agreement in Telework’)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근무자를 사업장 근무자와 동일시 할 필요를 언급 - 7가지 고려사항(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설비기기, 건강·안전, 취업규칙, 트레이닝, 단체권리) - EU지침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의 실정에 맞도록 이행 및 보고의무 규정
IL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ILO Convention Concerning Home work’ 및 ‘ILO Recommendation Concerning Home work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근무를 가내근무(Home work)의 한 형태로 파악, 가내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동 협약 및 권고상의 제 규정을 원격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율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법 제30조의 온라인 원격근무 관련조항과 특허청 및 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규정 · 민간부문에 직접 적용되는 u-Work 관련 조항이 없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의 확대해석을 통해 u-Work의 관련 법적 문제가 규율되고 있는 실정

4. u-work 법제지원 방안

u-work의 도입은 임시직 내지 계약직 형태의 근로자를 양산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이들의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산업재해, 연금, 교육훈련 등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u-Work 근무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보안,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규들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억제하고 차별하는 조세규정의 개선 및 세금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u-Work의 근무형태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사업자 및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u-work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u-Work 관련 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기관 등에 의한 법령해석의 기준 또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u-Work를 위해 준수하고자 권장하는 자율 수칙으로 관련 분야의 법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현행 개인정보보호 입법 체계는 공공·민간 분야별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소관 부처가 규율하고 있어 정보프라이버시 전반을 포섭하는 기본 원칙 및 방향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다원화된 추진

50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체계로 인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일관적·체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임박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약칭	1안	2안	3안
의안명	개인정보 보호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주체	정부(행정안전부)	변재일의원(민주당)	이혜훈의원(한나라당)
의안번호	2369	1598	570
제안일자	2008.11.28	2008.10.27	2008. 8. 8
회부일자	2008.12. 1	2008.10.28	2008. 8.29

2.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과 과제

가. 해외 법제화 동향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privacy impact assessment: PIA)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예측 및 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해외 선진국들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표 22> 주요국의 PIA 관련 제도

국가	주요국가의 PIA 동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법 제208조 - 각종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전자정부 사업에 따른 국가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5월 PIA Policy를 통하여 PIA 도입을 의무화, 8월 PIA 지침고시 - 프라이버시감독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대국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시행함에 있어 PIA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일부 주에서는 보건·의료기관 등 일부 분야에 대한 PIA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 안에 규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A 관련 법률이 없고,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자발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프라이버시감독관 이 프라이버시 핸드북으로 지침마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A 관련 법률은 없고 프라이버시감독관의 가이드라인발간

나. 개인정보영향평가 법제화 방향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선진 각국에서 일부분 의무화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적어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내용

1안	2안 ·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시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함 · 영향평가 수행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 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파일 신규 구축·확대·변경시 및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동시를 의무대상으로 규정 · 확대·변경이 경미한 경우 개인정보보호기구인 위원회에 통지 · 지정된 요건의 평가·인증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

1) 평가대상 기준

통상적인 평가 대상은 ① 개인정보 파일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와 ② 개인정보 파일을 연계하거나 수집·이용 등이 변경·확대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구축 및 변경·확대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등을 염두에 두어 평가대상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2) 평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OECD 8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최근 들어 IT compliance(준수감사평가)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사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할 뿐 아니라, 법적 준거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평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방법 및 절차

영향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영향평가 대상, 절차, 수행 인력 등을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상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외부 전문업체 지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외부 전문기관 자격기준을 법률을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보유 인력 및 정보보호 컨설팅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현장 실사, 심의회 구성·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인증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정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기관을 활용하되, 기존 평가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소양 함양을 위한 추가적 자격 기준을 별도 고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쟁점과 과제

가. 주요국가의 법제 현황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영국은 1984년에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84)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정보보호법은 공·사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에 대한 특별시행세칙으로 The Tele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of 1998(Direct Marketing Regulations; S.I. 1998 No.3170)이 있다.

54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프랑스에서는 공·사 구분 없이 개인정보법이 통합법으로서 1978년 제정된 프랑스의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이하 여기서 ‘개인정보법’이라 함)」이 기본법으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개별법이 존재한다.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라는 통합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 장(章)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왔고,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표 24> 개인정보 보호기구 관련 주요국가의 법제 현황

국가	주요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법 및 특별시행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부문의 구분 없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 -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적용범위확대(전자형태에서 수기파일링시스템, 의료기록, 교육기록으로 확대) · 정보보호감독관(Data Protection Commissio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왕임명의 독임제 구조를 가진 독립된 법정기구로 공공등록부 유지 및 관리 - 개인정보침해사건, 사업자·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의 접수, 조사, 심사를 통한 분쟁해결 및 피해자 구제 등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부문의 구분 없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특별법 · 정보자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을 갖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1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입법·사법·행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2/3은 의회나 법원에 의해 선출 - 임명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 - 등록 또는 신고접수를 통하여 정보처리 및 축적현황 파악 및 정보처리과정 규제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보보호법(BD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법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율 - 정보통신역무에 관한 기본조건의 규율에 관한 법률, 통신역무정보보호법 등 각각의 주요한 개별법이 존재 · 연방개인정보보호관(현재는 연방정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상 연방내무부소속(예산, 인력자원 등의 지원) - 직무수행상 법률에 따른 독자적 기구로 주로 우편이나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설치, 운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으로 따로 규제 · 독자적인 국가차원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없음 ·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주무대신의 인정으로 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 개인정보피해구제 역할 담당

나.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내용

제1안은 법안 제9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명시하고 있고, 제2안은 법안 제40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안은 법안 제34조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5> 개인정보보호법(안)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내용

제1안	제2안	제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위원회를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위원회 설치 ·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다. 법제화 방향

합의제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쟁점은 그 독립적 기능 수행의

담보에 초점이 맞춰 있으므로 관건이 되는 것은 합의제행정기관이 원행정기관의 관여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정작용을 담당하느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업무가 적절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사무분장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1안의 경우 심의기능에 국한된 의결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성을 견지한 위원회의 법집행으로 완결된 개인정보보호사무를 수행하면서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까지 위원회의 권한으로 업무처리를 행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있어 자족적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2안과 3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4. 개인정보피해구제의 쟁점과 과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여 손해액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민사법원을 통해 위자료가 집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불복청구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불복청구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만은 그다지 실익이 없으므로 권리구제의 실질적 확보가 요청된다. 따라서 정보주체

의 정보자기결정권 회복이나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전보를 위한 행정상 법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개인정보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사법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권리구제를 달성할 경우 현재의 미진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집단적 소송형식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기되고 있다

<표 26>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구분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의미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	장래에 그와 유사한 행위를 못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비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자에게 전보할 뿐만 아니라 본보기로 가해자를 처벌
수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안에 규정 조사·연구·분석에 따른 전문화된 검증을 통해 분쟁조정의 적정화 및 집단소송의 제도화를 개별법으로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여 어느 영역에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분리하더라도 그 수용을 대신할 만한 제도적 방안을 보충할 것인지를 결정 양자를 분리하는 경우 민간부문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부문과 함께 행정형벌로서 벌칙에 있어서의 양형수준을 상향조절하는 절차가 필요

집단소송제도는 그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책임을 질 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실정법상 이미 개별영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침해구제방안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수용자체가 법체계상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징벌적 책임의 가중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는 내면적으로만 주목토록 함으로써 그 제도적 수용이 보다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제5장 정보사회의 정보화역기능 제도개선방향

제1절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최근 사이버 위협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DDoS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은 그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국적 영향력을 실감하게 해주었고 사이버 세상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다. 특히 사이버공격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적·기술적 대응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조치와 이를 위한 법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 사이버테러의 의미

현행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사이버 공격”²⁰⁾을 정의하고 있을 뿐, 사이버테러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사이버테러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①보호법익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사회 및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하여야 할 것, ②행위의 주체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 ③수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시적으로 하되 국가 및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는 결과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 등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포섭하여 개념정의를 해보면, 사이버테러는 “정보통신 이

20) 해킹,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

용자에 대해 정보통신을 매개로 하는 각종 서비스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사무수행의 안전성을 해칠 목적으로 사이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불법행위(act of Vandalization of Cyber)”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표 27> 사이버테러의 의의

사전적 의의	· 주요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로서 정보화시대의 산물로서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군사, 행정, 인적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
사이버 공격	·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logic bomb)· ²¹⁾ 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2호)
미국	·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고자 할 때 컴퓨터 네트워크 및 그 속에 저장된 정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불법 행위 또는 법적으로 승인된 권한없이 사이버시스템에 침입하여 폭력, 파괴 또는 방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일본	·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국의 국방, 치안 등과 관련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데이터를 파괴하는 등의 수단으로 국가 또는 사회의 중요한 기반을 기능부전에 빠뜨리는 행위 ²²⁾

21) 보통의 프로그램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루틴을 무단으로 삽입하여, 특정한 조건의 발생이나 특정한 데이터의 입력을 기폭제로 컴퓨터에 부정한 행위를 실행시키는 것. Daum백과사전 참조

22) 양근원, “사이버테러 대응과 현행 절차법 검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1호, 2004, 183면

2. 현행 대응법제와 문제점

현행 조직법 체계에 의하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국가정보화, 경찰, 검찰,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국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사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사이버의 안전과 관련된 개별작용법에 의한 계획과 정책들의 효력우위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반개별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시설개별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한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은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계획을 총괄하여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미국의 사이버테러 관련 법률

미국은 포괄적인 사이버테러정책 및 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9·11 테러를 계기로 많은 테러법이 제정되었으며,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애국자법」 외에도 국토안보법과 같이 각각의 목적을 달리하는 정보기관의 개별적 역량을 극대화하면서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표 28>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률

법명	주요 내용
국토안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안보부의 국토안전보장업무 총괄 · 주요기반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 및 기반보호국’을 설치 · 주요기반보호센터, 주요기반보장국, 국가통신시스템, 컴퓨터 비상대응팀 등의 기구를 통합 · 포괄적 테러로부터 미국의 국가기반을 보호하고자 제정
애국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집행기관의 용의자 관련된 전화번호 기록 권한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통신으로 확대 · DCS1000(통칭 ‘카니보어(Carnivore)’ 등에 의한 IP 주소 등의 기록(통신내용의 기록은 불허)을 인정 · 사람의 생명 등에 관한 긴급사항 발생시 인터넷 통신사업자가 법집행기관에 대한 고객통신기록(통신 내용을 포함)의 공개를 합법화 · 컴퓨터 해킹과 같은 전산망 침입자의 감시에 필요한 피해자(컴퓨터 소유자)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통신감청 의뢰요구를 수용 · 사이버테러의 억제와 예방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 ·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년 이내에 야기한 모든 사건의 피해규모를 합산하여 해커를 처벌 · 국방이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컴퓨터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처벌 가능
해외정보 감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외정보 수사를 강화를 위해 “해외정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집을 규율 · 보안수사와 연계한 물리적 비밀 잠입수사를 허용 · FISA에 의한 수사 절차 및 승인에 관한 구체적 내용 규정
법집행기관을 위한 통신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통신기술 환경에 직면하여 법집행기관의 전자적 수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함
연방정보 보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토안보부에 부여 · 연방을 지원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보호 통제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제공 · 연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장치 개발 및 유지를 제공 · 연방 정보보호 프로그램의 감독 및 개선을 위한 메커니즘 규정

4. 법제 개선방안

미래 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이버테러 발전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행조치로서, 첫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법제화하여 사이버위기 내지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적 개념정의를 두고, 이상 패턴에 대한 국가기관 상호간 데이터의 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조직법에 의해 분장된 사무별 개별 국가중앙행정기관간의 전문역량(Synergy Effect)을 통한 데이터의 정보화와 개별 정보의 국가적 통합관리에 의한 지식화를 통한 국가적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국가사이버위기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현행법상 상호모순 충돌하는 사이버위기와 관련한 계획 또는 정책간 효력 우선순위 등의 법정화가 요구된다.

제2절 국가정보보호 추진체계 개선방향

1. 정보보호의 의의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안)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의미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내·외부의 위협요인들로부터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및 전산시설 등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²³⁾

2. 주요국가의 정보보호 추지체계 및 관련법제

독일에서는 현재까지도 테러 또는 사이버테러 예방이나 처벌을 위한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개별 형벌법규를 통하여 테러와 사이버테러 방지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법, 통신서비스법, 연방데이터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통신법, 형법, 연방정보기술안전청 설치에 관한 법률, 연방의 정보기술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률 등 정보보호법제의 정비를 통해 사이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사이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법률로서 규율하는 외에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과 사고발생시의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것, 사건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관련기관 간 기능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이러한 기관들의 수평적 협업을 통하여 사이버위기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직속의 관리예산처가 전자정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정보보안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관리예산처가 추진체계의 중심에 있다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안보시스템의 경우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사이버위기관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서 국토안보부가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보안 관련법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23) 위키백과 참조

<표 29> 해외 각국의 정보보호 추진체계

국가	조직		역할	
독일	연방정보기관(Bundesnachrichtendienst, BND)		· 독일연방 수상의 직속기관	
	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	연방헌법보호청 (BfV)	· 국내 치안유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국내의 마약, 테러범 등에 대한 정보수집
		경찰업무국		·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및 마약업무
		연방국경수비대		· 연방 국경의 수비
	군정보기관(MAD)		· 군 내부에서의 정보활동을 수행	
일본	내각관방성 정보시큐리티센터 (NISC: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 정보보안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분석 · 각 성·청간 조정과 정부기관의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 · 성·청에 조기경계정보를 제공, 피해정보 파악·원인분석 등을 수행	
	사이버포스		· 경찰청에서 운영 · 발생 사이버 테러 등에 직접 대처함과 동시에 사안대처 활동 지원	
	사이버클린센터		·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의 공동사업으로 운영 · 해당 사이버클린 운영회를 중심으로 IPA, JPCERT, Telecom-ISAC가 실무를 담당	
	국민을 위한 정보보호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통신인프라의 정보보호 확보, 전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등 공공부문과 대국민 정보보호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 국경경비, 재난 및 화생방 공격 대비 활동, 정보 분석, 이민 관리, 사이버 보안	
	국가사이버안보국 (National Cyber Security Division, NCSD)		· 국토안보부에 의해 운영 ·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력 증진	
	사이버보안정책관 (cybersecurity policy official)		· 국가사이버 보안 정책 추진 총괄	

<표 30> 해외각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

국가	법률	주요 내용
독일	정보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	· 정보기관의 기밀누설 방지,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책임자에게 고객정보를 정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부과
	통신서비스법 (Teledienstegesetz, TDK)	·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위법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정보차단의무를 부과
	연방데이터보호법 (Federal Data Protection Acts, BDSG)	·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각종 의무,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 비디오감시, 익명성, 스마트카드, 민감한 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내용 · 비디오감시에 관한 규정 신설(200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법	·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 이메일서비스제공자, 온라인 게임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객정보를 이용·처리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
일본	부정액세스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고도정보화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무력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 국가,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역할분담, 지정 공공기관의 역할,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실시 체제 · 총무성과 소방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및 계획 수립

일본	정부기관의 정보시큐리티 대책을 위한 통일기준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에 대해서 PDSC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운영측면에서 효율을 강화 · 최고정보보안 어드바이저 설치를 의무화 · 전문가의 지시나 어드바이스가 조직전체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대응 ·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웹열람 및 통신시의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웹클라이언트의 보안을 설정하고, 웹사이트 송신시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대책을 추진 · 무선랜 환경이 갖는 취약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밀을 요하는 정보가 취급되는 무선랜 환경에서는 통신내용을 암호화하는 것을 추가
미국	컴퓨터보안법 (Computer Security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의 기밀정보에 관계되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계획수립
	문서사무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보안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축적된 데이터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
	클링거 코헨법 (Clinger-Cohe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감시하는 정보화책임관을 각 부처에 배치 · 상무부에 대하여 국가표준기술연구소의 기준을 활용하여 연방정보시스템의 보안지침을 마련
	전자정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컴퓨터 사기 및 오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정보처리에 대한 범죄적 행위를 규제(1986년)

3.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법제 및 추진체계 분석

가. 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유형별 분류

국내의 정보보호 법제는 각각 제정목적 및 기능별로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법제, 국가기밀 보호 관련법제, 중요정보의 국외유출방지 관련법제, 전자서명 및 인증 관련법제,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호조치 관련법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처벌 관련법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1>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 법제

체계	법률 및 주요 내용
국가 사이버 안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사이버 안전 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등 사이버 안전 관련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임무, 관련 기관간 협력사항
전자 정부 보호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부법 :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보안사고 발생시 대응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설치
정보통신 기반 보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침해사고대책본부,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개인 정보 보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표 32> 국가기밀 보호 관련 법률

법률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법	· 제3조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규정 · 제8조 회합·통신
보안업무규정	· 제3조 보안책임, 제2장 비밀보호
군사기밀보호법	· 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 제12조 내지 제15조 군사기밀 누설 관련 조항
형법	· 간첩죄, 일반이적죄, 외교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암호사용/부정사용	·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국가정보원법」, 「군형법」

<표 33> 중요정보의 국외유출방지 관련법제

법률	주요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제9조)과 보호조치(제11조) 및 수출승인 등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과 침해행위의 금지(제14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누설을 금지(제38조)/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1조)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해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제25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2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제18조)

<표 34> 전자서명 및 인증 관련 법제

법률	주요 내용
전자정부법	· 공인전자서명과 인증을 규정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공인인증 제 구역무 영역을 설립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지정

<표 3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처벌 관련법제

법률	주요 내용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 제28조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2조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비밀 등의 보호의 무 위반에 대한 벌칙
전자무역촉진 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 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처벌
물류정책기본 법	· 제71조의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 및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등의 벌칙
형법	· 컴퓨터 사기죄

나.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법제 분석

국가사이버 안전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에서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등 사이버 안전 관련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임무, 관련 기관간 협력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경찰법 등이 사이버안전 관련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부처 차원보다는 국가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안」²⁴⁾이 제출되었다.

전자정부 보호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정부의 정보보호를 위해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보안사고 발생시 대응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보장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다. 그 외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자정부 보호체계 관련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체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침해사고대책본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등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24) 주요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위기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기 발발시 국가정보원장이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법안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제안 설명되었다(2009. 4. 23)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주민등록법」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개별분야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특정한 조건을 두어 적용범위를 한정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법제 상호간에도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정보의 침해에 관하여 사후적인 구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문·민간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4. 정비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호 추진체계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향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정보보호 추진체계의 정비에 있어서는 현행법상의 분업적 협력시스템을 무시하고 특정부처에 독점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법·제도 수립과 문화운동, 기술개발 등을 따로 떼놓고 할 수는 없는 일이며, 분업적 협력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기능을 통합하는 정보보호 추진체계 개편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절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1. 정보격차해소 정책

가. 분야별 정보격차해소 정책

정보사회가 고도화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화되자,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표 36> 분야별 정보격차해소 정책

분 야		추진정책
취약계층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 및 전문가 양성 ○ 보편적 접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추진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취약지역 정보이용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마을 내실화 및 운영활성화 ○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지원
	정보통신기기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PC 보급 ○ 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 ○ 우수 정보통신보조기술 개발지원 ○ 장애인상용보조공학기기 지원 ○ 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 방송제작 및 기술개발
취약계층 정보활용 여건개선	인식개선 및 정보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 보호소년 및 재소자 정보화교육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 주민정보화교육
	정보화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정보 제공시스템(work-net) 운영 ○ 장애인 IT 전문교육 ○ 재소자 IT 전문교육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보급 ○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 ○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정보 DB구축 ○ 정보소외지역의 도서관서비스 증진 ○ 특수 언어 표준화 지원 ○ 농·어업정보서비스 제공 ○ u-보건복지 기반조성

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세부적 보완

공급자인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용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보급, 정보통신기기 보급의 인프라 보급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실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경제적·정신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 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이라는 이른바 4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정보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4대 계층 중에서도 정보접근 및 활용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는 계층을 선별하고 세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소외계층의 권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정책을 탈피하여, 실질적 의미의 정보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접근 및 활용은 경제적 차원의 생존권과 결부지어진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정보격차해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정부-민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주도의 정보격차해소정책 시행은 인력부족, 재정적 한계, 조직의 비탄력성,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다. 새로운 정보환경 및 그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도 오는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인 방송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방송 신호를 디지털화 신호로 바꿔주는 수신 장비인 디지털 컨버터 구입시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위를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지원할 것인지, 또는 정보취약 계층에게만 지원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 지원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방송의 의무 재송신과 관련한 문제도 정보격차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바 방송법영역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과 관련하여 큰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세부쟁점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현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보다 고가의 지능형의 하드웨어 디바이스 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술발전을 연구하고 지원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가의 보조기기가 아니면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이를 보조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정보격차해소의 법이론적 과제

어느 정도 정보격차가 안정적으로 해소²⁵⁾되었으므로 정보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해소정책 추진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정보는 이제 직업 활동 등 사회생활과 연결되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므로, 정보격차해소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역량과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해소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장·노년층의 역량격차는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접근 중심의 격차”해소가 아닌 국민 전반의 정보수용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함께 견인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보격차해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취약계층에 국한한 정보격차의 개념은 그 협소성과 접근중심의 체계화 때문에 정보가 생활의 필수적 기반을 넘어 사회적 생존과 수익활동의 근원이 되는 점까지 포섭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미흡한 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격차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정보사회의 생존기반이므로 그것은 접근의 향유나 기회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된다. 즉 모든 국민의 특별할 것 없는 일상생활이 되는 정보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한차원 높

25) 일반국민과 소외계층간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에서 접근지수에 관한 한 2004년 일반국민과 36.3의 격차가 있었으나, 점차 격차가 축소되어 2005년 29.0, 2006년 19.8, 2007년 13.5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거의 접근부분에 한해서는 거의 사회전분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보다 오히려 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접근 중심의 정보격차는 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은 개념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한적 의미를 갖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나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가 아닌 포괄적인 "정보생활(digital life)"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정보향유권은 이러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보접근능력이나 정보수용능력이 결여되면 국민은 제한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수한 계층을 상대로 한 "정보접근권"이라는 사회권적 복지의 차원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향유권" 또는 "정보인권"이라는 본질적인 기본권을 지향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향후 법제 개선 과제

정보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관련 법제는 정보기술의 발달 속도에 대응하여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 IT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기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어 법의 완결성 내지 완성성에는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보화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화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바꾸어야 되거나 새롭게 논의해야 할 사항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10개의 개별보고서는 각기 정보화 관련 주제별 법체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해외 입법 추진현황 조사를 토대로 정보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및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각 주제별로 논의된 핵심 쟁점과 법제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표 37> 정보화 법제도 쟁점 및 개선과제

분야	쟁점	과제 및 고려사항
기초연구	정보 기본권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입헌주의에 기초한 헌법개정을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전제 · 향후 기술발전이 생활관계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체계화를 시도하는 헌법개정 필요
	정보법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본권’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지위와 법적 성격이 규정 ·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전송 기술 기반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서비스의 특성에 근거하여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평적 규제원리와 규제수준을 설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마련 · 정보보안과 침해사고시 군·관·민의 각 영역을 모두 관할할 수 있는 기관과 근거법률을 마련 ·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이버공격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방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법제개선 필요
공공 정보 화 촉 진	민원 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규정, 민원사무처리법, 전자정부법 등에 행정기관의 공문서 및 민원업무에 적용되는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필요 · 민원사무처리법과 전자정부법에 신청 및 처리결과 통지 문서에 ‘전자화문서’를 추가하고, 기타 민원인이 신청하는 서류의 전자화 절차·방법 등을 명시 · 원본 보존 기준마련이 필요 및 · 민원인 또는 제3자가 원본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방안 필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원본을 폐기하고 전자화문서로 생성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 규정 · 온라인 민원처리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법 또는 전자정부법에 민원신청 시 신청서나 구비서류를 문서나 전자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화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

공공정보화추진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재난 관련 개별 법률 통합 · 재해의 원인이 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재난관리법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종합적 재난관리체계의 마련 - 일원화된 재난대응체계의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난관리사무의 명확한 구별 - 국가관리 재난과 지방자치단체관리 재난의 구분 -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한 재난의 특성에 맞는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방안의 마련
	디지털 자료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도서관법의 관련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하여 법조문 조율 · 보존은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열거주의를 채택한 저작권법에 명시 · 도서관 자료의 납본은 도서관법에 규정하고, 온라인 자료의 수집은 저작권법에 규정 · 문화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보존의 법적 근거 마련 · 납본에 관한 규정 단일화 ·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규정(법 제31조 제1항)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모두 규정하여 체계화 도모 · 현행 저작권법에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저작재산권이 제한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본 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사회현안해결	u-work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의 사생활 감시, 재택근무자의 근무 중 과실 및 산업재해의 문제, 업무의 확대에 의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문제 등 u-work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룰 법제도 정비 · u-Work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 마련 · u-Work를 도입하는 기업과 u-Work를 선택하는 근로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 노동조합과 경영단체의 협약, 정부의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u-Work에 대한 원칙을 확립

사회현안해결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화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기능을 전담할 준입법적·준사법적인 기능까지 겸비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 개인정보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로서 정보자기결정권 회복이나 피해에 대한 정당한 전보를 위한 제도 필요
정보사회역기능개선	사이버 테러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법제화 · 사이버테러의 법적 개념 정의 · 사이버테러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현행법상 상호모순 충돌하는 사이버위기와 관련한 계획 또는 정책간 효력의 우선순의 법정화
	국가정보 보호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분업적 협력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정보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해소정책 대상의 확대 필요 · 정보수용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고려한 정보격차해소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제한적인 정보격차에서 포괄적인 정보생활 개념으로 전환 · 정보향유권 지향

이번 연구결과는 정보화 전반에 있어 주요한 법제도적 쟁점들을 기초 연구차원에서 논의한 것으로 새로운 정보화 정책에 부응하는 법제정책의 단초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도출된 법제도 개선방향과 과제를 정부의 정보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에 필요한 법제 정비 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법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권건보,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헌법적 문제점의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1호, 2008.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권현영,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입법체계”, 연세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5.
- 권현영,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
-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 김승환,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 김종철, “관료국가에서 계약국가로? -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의 변화”, 법과 사회, 제20호, 2001.
-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인터넷 법률 제4호,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박진애,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
-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 성낙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
- 양근원, “사이버테러 대응과 현행 절차법 검토”, 인터넷법연구제3권 제1호, 2004.

- 오용수, “수평적 규제체계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소고”,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통권4호, 2006.
- 이향선,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
-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제31집, 2008.
- 임규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3년 8월 20일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3.
- 정영화, “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7호.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서비스 추진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2007.12.
- 한국정보화진흥원, 'IT정책연구시리즈, 정보화법제개편 진단과 개선방향', 2009.4.16(제3호).
- 한상희, “정보화시대와 헌법의 해방적 관심 - 헌법정치를 위한 시론 -”, 민주법학, 제13호, 199.
- RFID저널 코리아, “u-city 법제도와 IT이슈 풀어야 성공”, 2009.10.12.

국외 문헌

- A.Etzioni, The Limits of Privacy, Basic Books, 1999.
- J.Morison, Online government and e-constitutionalism, Public Law 2003.
- R.Silcock, “What is e-Government?, Parliamentary Affairs”, Vol.54 , 2001.
- R.Whitaker, The End of Privacy, 1999.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

2009년 12월 인쇄

2009년 12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태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전화 : (02) 2131-0114

인쇄처 : 호정씨앤피

전 화 : (02) 2277-4718

<비매품>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무단전재(無斷轉載)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